통치자금 차단·北 선박 접안 금지 검토

■한·미 천안함 '추가적 대북조치' 뭘까

게이츠 美 국방 "北 책임 묻기 위한 추가조치 고려"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제3차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은 컸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언급한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우리 당국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언급한 추가조치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엔의 대응방안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에서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런 기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비군사적으로는 북한 핵심권력층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취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의 경험에 의해 북한 핵심권력층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추가적인 대북조치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통치자금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BDA 제재를 통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동맹국 항구로 확대 적용해 북한 선박을 철저히 검색해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여의치 않으면 항구 접안을 금지하는 조치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군사적으로는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과 유사한 야외 합동기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등에서 실제 전투기동 병력 및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해 정기적으로 대북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고려 중인 추가적인 대북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치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이츠 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 4일 김태영 장관과 양자대담을 마친 뒤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생존 장병들이 천안함 46용사 합동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러 설득 시간 필요할 듯" 난항 예고

■안보리 '천안함' 논의 얼마나 걸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아니면 난항을 겪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볼 때 상식"이라면서 "이들을 설득하면서 북측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이 우리측의 모략극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제합동조사단의 '북측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고, 또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때는 5일(뉴욕시각) 발사 이후 6일부터 12일까지 협상을 벌인 뒤 13일 공식 성명 발표까지 8일이 걸렸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도출에는 16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북핵 실험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중·러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팩트(사실) 자체에 대해 한·미·일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러가 안보리 논의 초기 과정에서 사실 관계부터 따지고 들 경우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이번 달 안에 논의가 끝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중·러를 상대로한 다각적인 설득작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예상외로 조속한 결론 도출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대(對) 러시아 설득작업을 벌인 것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막

두달만에 회의 소집 이례적

'후계체제 공식화' 등 주목

법령 등 입법조치 가능성도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가 7일 평양에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결정'을 통해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 제12기 3차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4월9일 열린 제12기 2차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이례적이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안과 헌법 개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12기 3차회의에서는 이들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등의 인사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의 '공석'을 메우는 후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해 사실상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고인민회의가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 초 중국 방문 결과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밖에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최고인민회의가 그동안 취해온 북한 정부의 강경한 대남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日 새 내각 윤곽…反 오자와 대거 포진

간 총리 당정 동시 장악

강력한' 리더십' 펼칠 듯

간 나오토(사진) 일본 민주당 대표 겸 신임 총리가 내각과 당의 핵심 인사를 발표했다. 당과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반(反) 오자와 그룹을 대거 포진시켜 탈(脫) 오자와 색깔을 분명히 했다.

내각은 외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11명을 유임시켜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와의 국정 연속성과 안정을 중시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당내 최대 세력인 오자와 이치로 그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간 총리는 내각과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인사구상을 관철했다. 간 총리는 내각은 하토야마, 당은 오자와가 맡았던 하토야마 정부의 '이중권력'시스템에서 탈피해 자신이 당과 내각을 한 손에 장악함으로써 당정 일체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反오자와 당정 전면 배치=간 총리는 당정의 핵심 요직을 반 오자와 계열의 인물들로 거의 모두 채웠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반 오자와의 선봉인 에다노 유키오(46) 행정쇄신장의 간사장 발탁이다.

에다노 행정쇄신상은 당 정조회장을 지내 정책통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조직통솔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다. 민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423명을 거느린 거대 정당이다. 리더십과 협상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자와 그룹이 강력히 반발했고, 총리 측근들도 재고를 요청했지만 간 총리는 에다노의 간사장 내정을 밀어붙였다.

간 총리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총리보다 당 간사장이 논쟁에 나서야할 일이 많다. 선거의 얼굴로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의 한 중견 의원은 "이제 오자와는 민주당에 필요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다.

◇업무 연속성·재정문제 중시=간 총리는 내각을 전면 물갈이하지 않고 일부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11명의 각료가 유임됐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의 유임은 의외다.

하토야마 내각의 단명에 결정적이었던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각료들이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의 원활한 마무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오카다 외상의 유임으로 한일 외교관계도 기존 기조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